

# ISSUE & FOCUS

[한중동북아포럼] 한반도 통일과 한중 역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 한반도 통일과 한중 역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 1: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가치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韓民族)의 문제이다. 한민족(韓民族)의 미래의 번영과 자존과 평화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문제만인가?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21세기 동북아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21세기 동북아가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립과 갈등의 길로 갈 것인가?’가 한반도 통일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는 21세기 세계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나, 한반도가 통일에 실패하면 동북아에서는 제2의 냉전(冷戰)이 시작되고 언제든지 열전(熱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쟁가능지역이 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일본의 화해를 촉진하고 이 지역의 화합자 내지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極東)지역에도 엄청난 경제적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지역을 21세기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고도성장지역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통일한반도가 동북아공동체--경제공동체, 안보협력체--를 만들어 나가는 번영과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에 실패하고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非正常的) 분단이 지속되면 결국은 ‘북한의 중국화(中國化)’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크다. 현재 핵을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북의 비정상(非正常) 권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제적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 중국화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중국화에 대하여 확고히 반대한다. 여하튼 북한의 중국화의 결과, 동해안에서 중국의 군함이 뜨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핵무장까지 포함한 재무장을 할 것이고 동북아는 빠르게 제2의 냉전

시대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경제는 다 함께 그 성장이 정지되거나 후퇴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韓民族)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나라 국민들의 이해(利害)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며, 실패하면 어둡고 예측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이 성공하면 모든 나라에게 축복이 되고, 실패하면 모든 나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 2: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현재의 북한권력이 혹은 현재의 북한권력을 대체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권력이 비핵화(非核化)를 결단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러면 1991년 11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지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통일(合意統一)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도 이웃나라에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새로운 개혁개방세력도 등장하지 못하고----결국은 체제붕괴(體制崩壞)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吸收統一)이 불가피하다. 현실을 보면 불행하게도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합의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체제 실패 이후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체제 실패가 언제 어떻게 오는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한 현재의 체제—수령절대주의(首領絕對主義)와 선군(先軍)체제---가 지속되는 한 비핵화(非核化)의 가능성과 개혁개방(改革開放)의 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의 경우에는 (1) 북한 안정화(安定化)단계 (2) 북한 체제전환(體制轉換)단계 (3) 북한 경제개발(經濟開發)단계 (4) 남북 경제통합(經濟統合)단계 (5) 남북 정치통합(政治統合)단계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1)부터 (3)까지 단계에서는 북한을 남한과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일정기간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한과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과정을 질서 있게 관리해야 한다. 노동의 이동은 처음에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의 경우 두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실패 이후 북한의 안정화(安定化)를 얼마나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군사적 안정화와 경제사회적 안정화를 함께 이루어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고 충분하게 되어야 한다. 북한 전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안정화의 문제는 물론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등 대량살상무기제거 과정에 유엔군의 기여는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할 것이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적 논의가 반드시 사전(事前)에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가능성이다. 우리는 어떠한 명분이나 형태의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남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높인다. 설사 단기적 부분적으로 개입에 성공하여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게는 큰 재앙(災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모두를 위하여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군사적 개입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한국과 중국이 미리 함께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생각하는 데는 아마 3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통일 과정의 대량난민(大量難民)의 문제 (2)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駐韓美軍)의 문제 (3) 통일로 인한 변방 완충지대(邊方 緩衝地帶)의 상실(喪失)의 문제 일 것이다.

대량난민의 문제는 남한이 주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 실패 시 신속하게 북한전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 안정화작업에 성공하면 사실 난민이 크게 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대량이든 소량이든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 시 빠르게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지대를 봉쇄하고 그 아래에 난민캠프를 설치하는 것이 시

급하다. 중국으로의 월경(越境)을 막기 위하여서이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하면 중국국경을 넘어가는 대량난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의 문제이다.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미군은 3.8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약속해야 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 후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보균형자의 역할을 하여 왔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재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남한 쪽에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 한반도 통일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내지 동아시아에서도-- 유럽연합(EU)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zero)가 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 3: 통일한반도의 미래와 중국의 미래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완충(緩衝)지대의 상실이라는 생각,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라는 전통적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완충지대의 상실--자신들의 영향권의 상실---이라는 생각은 낡은 생각이고 크게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만남의 장(場)’이 될 것이다. 소통과 화합의 장(場)이 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場)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 한반도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완충지대의 상실감 때문에 군사적 개입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통일한반도는 대국(大國)주의와 패권(霸權)주의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주장하고 대립과 대결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면 결코 참여하지 않고 반대할 것이고, 반대로 중국이 패권적 신(新) 중화주의를 이웃에 강요하려 한다면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 사이에 자주독립과 상호존중과 호혜의 국제관계를 희망한다. 따라서 완충지대론이나 순망치한론은 이제는 21세기 세계화 민주화 시대에 안 맞는 낡은 주장이다. 중국이 취할 올바른 정책은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權)의 존중(尊重)’과 철저한 ‘한반도 내부문제(韓半島 內部問題)--민족 내지 국가 내부문제-- 불개입원칙(不介入原則)’이어야 한다. 다만 핵문제는 한반도 내부문제로 끝나지 않고 인류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도 된다.

얼마 전에 중국의 외무성 책임자가 한반도와 관련 두 가지 레드 라인(red line)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한반도 전쟁에 대하여 반대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 붕괴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두 가지로 인하여 중국의 문 앞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주장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북한의 붕괴에 반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체제붕괴는 북한의 집권세력의 국가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현상이다. 독재자에게는 불행이지만 인민대중에게는 축복이고 해방이 되는 데 중국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한반도 내부문제 불개입원칙에 정면으로 반(反)한다. 전형적 대국(大國)주의적이고 패권(霸權)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4: 중국은 왕도(王道)의 길을 가려는가? 패도(霸道)의 길을 가려는가?

세계가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과연 평화적으로 굴기(屈起, peaceful rising)할 것인가 아닌가?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왕도(王道, humane authority)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패도(霸道, hegemonic authority)의 길을 갈 것인가? 서구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시카고 대학의 미어사이머(John Mearsheimer)교수는 중국의 굴기는 평화적이기 어렵다고 본다. 즉 분쟁 내지 전쟁--제한된 전쟁---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반면에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는 지금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대단히 커지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굴기는 평화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나는 중국이 평화적으로 굴기하고 왕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 지도자와 국민의 지혜와 용기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중국이 평화적 굴기를 하면서 왕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닌가? 그 여부는 실은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남한주도의 통일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이것은 분명 왕도(王道)로 진일보하는 큰 걸음이 된다.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의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새로운 분단을 창조하려 한다면, 이것은 분명 패도(霸道)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패도의 길을 선택하면 중국의 굴기는 결코 평화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중국에게도 이웃나라에게도 모두 불행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4년 전에 필자는 ‘중국이여 왕도(王道)로 가라’하는 조선일보 칼럼(2010 10. 14)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본래 중국은 덕치(德治)와 왕도(王道)를 주장한 성인(聖人) 공자(孔子)를 가진 나라이다. 오늘날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 300개가 넘는 공자학원(孔子學園)을 세우고 있다. ----일찍이 공자께서 한반도를 군자국(君子國)이라고 칭송하였다. 중국은 군자국의 분단과 고통위에서 작은 이익을 도모해선 안 된다----중국이 북(北)의 반(反)문명적 세습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남한과 힘을 합쳐 북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루어, 남북통일에 기여한다면, 중국은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봉우(朋友)가 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평화대국(平和大國)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평화대국으로 가는 결단은 최선을 다해 한반도의 통일을 돕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그 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반도가 ‘통일로 나가는 길’과 중국이 ‘왕도(王道)로 나가는 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의 길, 세계평화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길 희망한다.